

풀뿌리민주주의와 공공성: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Grassroots Democracy and Publicit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김 찬 동 (Chandong Kim)**

ABSTRACT

In the case of Korea, the Constitution declared democratic republic and sovereign residents and operated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is law. However, it is difficult for sovereign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in neighborhood autonomy, local autonomy, or regional autonomy due to the local autonomy system designed as a collective autonomy paradigm even at the present time in the 21st century. One of the means for Korea to move toward a country that creates leading innovation in human culture in the 21st century may be to express grassroots democracy in the neighborhood autonomy system. With Korea also urbanized and more than 90% of its citizens living in urban areas, how and where can grassroots democracy begin in a reality where communities have disappeared?

The church community organization is the organization with the greatest potential to play this role in the neighborhood autonomous region. Through Calvin's religious reform, the church community taught theologically that not only the reform of faith but also the people of God should actively participate as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and play a role of love and service in urban government and national political life.

The Korean church actively teaches personal spirituality and faith through church education, and discipleship training once had a great revival, but it was indifferent and passive in participating in the world. Although the church community is encouraged to practice the structure and behavior of the church community through the common assembly,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they were indifferent to self-rule and democratic reform in the world country and community to which

* 2026년 8월 13일 접수, 9월 4일 최종수정, 9월 5일 게재확정

** 충남대학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도시사회융합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cdkim15@cnu.ac.kr

the church community belongs. They were immersed in individualism that did not practice what they learned and experienced within the church in the world. However, although the world is legal as a democracy, anti-democratic behavior using the law and anti-democratic perceptions of the elite are emerging like poisonous plants. Accordingly, the church community should become an active citizen who serves the small, enters the world's problems with the spirit of the cross of Christ and shows the example of tolerance and love. This is the direction in which sain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citizens with public nature newly presented in public theology. Church communities that actively participate in resident autonomy and active as leaders of the world should be operated by church officials. Resident autonomy can be a legal space where grassroots democracy can participate and practice. Instead of making this space no longer subordinate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 common council of civil society should be created on the legal basis, and through this, the self-governance of the reborn saints that was cultivated in the church community should be practiced and activated.

In order to discuss this, Chapter 1 presents the limitations in academic studi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grassroots democracy. In Chapter 2, it explores the potential insights that public theology can offer for local and community self-governance. Chapter 3 analyzes the issues of privatization in Korean churches and the emerging demand for public-minded solutions. Then, Chapter 4 draws implic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new institutional designs for local and community self-governance in Korea, based on discussions in public theology. Finally, Chapter 5 offers suggestions for expanding public-mindedness through the converg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self-governance) and theology.

Key words: grassroots democracy, resident autonomy, public theology, Calvin, reform theology

I. 문제제기 : 풀뿌리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한계

한국은 헌법적 가치로서 ‘민주공화정’을 선언하고 있고,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민주주의국가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권자이다. 그러면서도 공화정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공화정의 핵심가치인 법치에 의하여 국가공동체가 다스려지는 것으로서 입법을 누가하는가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민주공화정을 위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국정차원에서도 국회를 선거로 구성하고, 지역구와 비례선거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진다. 또 지방자치차원에서도 지방의회를 선거로 선출하여 주권자인 주민들의 대의자들에 의하여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운영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방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기획과 관리에 의한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시스템은 존 스튜어트 밀(J.S.Mill)이 기획한 대로 정부가 운영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도 시민성이 개발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시스템이 될 것이다(밀, 2012).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권자들이 선거할 때만 참여하고, 그 나머지는 무관심하다든지, 대의자들의 토론과 속의 과정에 의하여 학습되지 않기에, 대의자들이 또 다른 귀족, 즉 엘리트화되어 과두정이나 심지어 독재정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세기의 인류역사를 통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의자들이 독재정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 정부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이 제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의자들에게 맡겨두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부운영의 부패와 독단적 이권행위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패이트만(Pateman)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통해, 불평등, 차별,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참여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적인 개인을 넘어서 공적인 시민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교수진, 2019).

참여는 일터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권위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하고, 민주적 정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참여사회라고 주장하였다. 권위구조의 민주화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은, 이를 통해서만,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읍면동 단위 삶의 구역을 보면, 주권자인 주민들이 근린생활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 시군구와 광역시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35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는 임명직인 읍면동장이 주민 센터의 행정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소비자가 되어 수동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읍면동 단위의 구역에는 주권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자체가 부재하다(김찬동, 2015).

지방자치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6년 4월14일 법률개정안(법률 제21544호)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에 법정화 되었다¹⁾. 그러나 읍면동 지역의 민주주의와 공공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는 문화적 토양이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읍면동 시민사회에 시민성에 기반한 공공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방자치의 전공자로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페이트만이 말하는 참여는 공동체단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는데, 한국의 읍면동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한 듀이(Dewey)는 민주적 공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공동체(the great community)로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다수결과 같은 결정규칙보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대화와 토론, 설득의 과정이 존재했는가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한국의 읍면동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이 들어설 공간(agora)이 부재한 것이다(김찬동, 2017). 이 문제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읍면동 공간에서의 민주적 공중을 과연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오고 있는 공공신학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해결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공공신학의 방향성과 근린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신학의 방향성

공공신학은 논의의 장을 시민사회로 둔다(성석환, 2019: 33). 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민사회의 관점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교회안에 가두어두려는 교회론적 윤리

1) 법률제21544호에서는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회의 업무, 위원위촉과 신분(명예직), 정치활동금지와 정치적 중립, 자치회에 대한 행정지원, 협의체구성 등이 가능해 졌고,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기여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한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짐

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한다(전게서, 33). 이 점에서 공공신학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와 시민종교에 대한 양쪽의 이해가 필요한 셈이다.

또 공공신학은 지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데 있어, 세상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민사회 속에서 종교의 역동성에 대한 고려가 놓일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시민사회는 사회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성립된 것인데, 이 시민사회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이(difference)와 교양(sophistication)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기독교가 공적영역에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독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절대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교의 비평적 역할은 공적영역인 시민사회에서 공공신학을 수립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다(Wuthnow, 정재영·이승훈 역, 2014: 91-97).

또 공공신학의 실천의 방향성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증진하고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해방신학이나 정치신학과 같은 급진적 방법보다는 시민 운동에 참여하거나, 평신도의 생활윤리를 성숙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Paeth, 2008: 40)²

자발적 참여나 민주적 의견의 개진이 쉽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성이 미성숙하기에, 갈등 당사자들의 충돌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신학의 지역화를 주도하는 존드 그루시는 공공신학의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공공신학은 단지 교회의 공적 선언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문제삼는 ‘신학하기(doing theology)’의 한 양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ruchy, 김철호 역, 2001: 7-8). 공공신학은 결국 공동의 유익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신학은 어느 한 방향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복합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삶의 통전성(integrity of life)을 증진시키는 책임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Schweiker, 2010: 24-25). 이 문제는 다시 기독교적 정체성과 규범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질문과 관련이 되어진다. 즉 기독교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과 공동체의 규범을 구축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

2) 스콧 R. 페스는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 관련 저서의 편집자이어서, 스택하우스가 공공신학, 사회윤리, 시민사회, 기독교의 공적 책임을 폭넓게 논의한 학자이기는 하나, 본문의 내용은 스콧 R. 페스의 저서 Exodus Church and Civil Society: Public Theology and Social Theory in the Work of Jürgen Moltmann(2008)에서 인용함. 여기서 스콧 R. 페스는 위르겐 몰트만의 정치신학, 공공신학과 시민사회론에 대해 주로 논의함.

이고, 이것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통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성석환, 2019: 37)³

2. 근린공동체에서의 공공성 요구

서구에서 형성된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시민을 주체로 삼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과 같은 특정집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공존하였다. 그랬기에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유사 가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종교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진정한 형성을 방해하였다고 한다(성석환, 2019: 76). 한국의 종교가 국가에 고분고분 시종드는 역할을 맡아오면서, 종교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거나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박영신, 2010: 133). 심지어 보수 극우적 기독교는 한국을 아시아의 최초의 기독교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종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치권력화를 지향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김현준a, 2025: 208)

특히 현대도시는 산업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적 이익사회가 되어버렸다. 도시적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구성원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제들을 민감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고 협력해야 한다.

3. 교회 공동체와 공공신학: 근린자치와 지방자치의 제도설계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민사회의 다원적 공공 영역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예술이나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체적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참여적

3) 심사자로부터 지나치게 특정 저서로부터의 인용이 높다는 지적과 2차 문헌을 통해 재인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학에 입문자로서 필자의 부족함과 게으름이 드러난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개인역량 개발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문화시민사회가 된다는 것이 단지 공연을 즐기고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지역의 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성석환, 2019: 85).

교회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문화적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민 인문학모임을 만들거나, 마을기업을 공동운영하는 것, 지역개발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 지역사회의 도서관운영과 같은 문화서비스를 자치와 참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품격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후기 세속사회에서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재구성을 통하여, 공동선을 고양시키는 것이 공공신학의 역할이다.

공공신학이 공공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사이에, 극우 개신교는 보수의 신학과 종교성, 정치적 신념과 행동을 극단화하는 현상을 시도한 것일 수 있다(김현준a, 2025: 220). 보수우파와 극우는 신학적 신념과 종교성을 상당부분 공유한다는 것이다. 즉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세대주의, 열광주의, 은사주의 등을 공유한다.

종교개혁가들은 도시를 무대로 하여 개혁의 영성을 이어갔다. 개인으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훈련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그 도시공동체안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했다. 칼뱅도 1541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제네바로 복귀하여, 교회와 시의회에서 활약하면서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한 것이다.

법령을 제정하고 규칙과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속사회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허례를 걷어내는 일은 제네바의 사회개혁과 동일한 시간표로 진행된 것이다(성석환, 2019: 301)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고, 도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세상에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가진 위험과 기회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III. 한국교회의 사사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요구

1. 한국교회의 성장과 사사화

한국의 지역교회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도시

에 존재하는 부정의와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였다⁴. 신학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한국 보수기독교는 오히려 기독교 내셔널리즘에 빠져들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기독교내셔널리즘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에 대한 충성이 되어버린다(김현준a, 2025: 213).

이런 와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자체도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건물도 구입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었지만, 정작 교회 공동체는 그 운영에서 매우 보수적이게 되고,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 성도 상호간에도 파편화되었고, 상호 불신과 상호 경쟁 속에 낙오된 개인들은 소외되고, 배제되기도 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교회의 이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교회재산과 교회의 조직권력을 사유화하고, 심지어 세습하고 과점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는 교회재정의 불투명성과 특정소수에 의한 교회권력의 과점화로 인한 범죄와 악의 침투로 교회 리더십이 무너지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은커녕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폐쇄성과 부패로 질책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강하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 성도들도 독재정의 우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기독교보수주의는 공화주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인하여, 근본주의, 냉전반공주의, 영적 전쟁과 문화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국가 대 비기독교국가라고 하는 신화로 변주되면서, 오히려 사실상 신정정치와 권위주의를 신봉하게 되어버렸다(김현준a, 2025: 215). 결과적으로 공화주의와 멀어지는 역설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계기로 보수 개신교단체들은 입법저지와 반동성애를 목적으로 네트워크 연합을 조직화하고, 차별과 혐오선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극우 개신교는 12·3 내란 이전까지는 광장정치와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보수주의 우파를 표방하기는 했어도 적어도 민주공화국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과 내란 이후에는 극우 기독교는 민주주의체제와 가치를 부정하고 기독교국가로 대체하는 것을 노골화하여 폭력적 양상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김현준a, 2025: 219). 이것은 교회와 국가 영역의 최소한의 경계를 넘어버린 것이다.

극우화된 신학은 칼뱅주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반공주의의 신학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한다(김현준a, 2025: 223).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적 다원성, 공공성, 세속 문화의 발전을 해석할 틀을 갖추지 못한 보수기독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가치 및 제도의 역사적 발전

4) 기독교보수주의는 근본주의로부터 복음주의 좌 우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특히 보수적인 친미반공주의 집단을 복음주의 우파라고 규정한다. 개신교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반공주의로 보고, 이를 가진 집단을 개신교우파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극우정치와 혐오정치로 경도되었다고 한다(강인철, 2020)

을 반공주의, 반마르크스주의적으로만 해석했고, 이는 곧 반기독교적이 되어 버린 셈이다⁵. 빈곤한 해석의 틀을 사회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적 가치의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극우보수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거나 우회하는 방법과 전략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고, 근본주의적 신앙의 적극적 실천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어그러진 이 길에서 돌이키도록 보수기독교가 공공성을 지향하고 회복하도록 공공신학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2. 한국교회공동체에 대한 공공성 요청

교회공동체는 근린(neighborhood) 시민사회에 속해 있다. 교회공동체가 작은 규모일 때는 설립자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의 수가 250명을 넘고 500명이 상의 규모가 되면, 근린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공공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그 운영방식이 설립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조직운영은 구성원인 성도들의 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운영자체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유지되고, 그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대표없는 곳에 세금없다는 명언처럼, 교회공동체의 운영도 성도들의 대표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의제 방식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의자들은 성도들의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선거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리더들을 성도들이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선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설립자나 교역자들의 추천이 곧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과두정이나 전제정에서나 나타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성도들이 총회에서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대의자들은 장로로서 당회를 구성하여 선거로 선출된 목회자와 교회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행사

5) 만일 보수 기독교가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공공성의 문제를 비정당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한다면, 한국 시민사회의 미숙함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본다. 즉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가 양극화된 정당정치에 의해 오염되어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시민사회 속에서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찬동, “정교분리와 지방자치리더십에 대한 정치 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64집(2026) 참고). 여기서도 극우개신교는 기독교의 순수한 영역을 넘어 이미 정당 정치화되고 있고, 이것은 정교분리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던 정통신학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회가 속한 시민사회와 국가공동체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리더들을 사회 속으로 육성하여 내보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공동체의 교육이 구원을 위한 신앙교육을 넘어서 교회공동체의 대 사회적 의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미래이기도 하다.

하게 된다. 이것은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운영에 도입된 장로회제도의 의사결정방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회공동체에서 개혁신학에 의하여 전통으로 정립된 장로회 즉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교회운영은 근린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에도 적용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노재성, 1989).

세상 나라에서도 지연 공동체나 지구(district) 공공체가 지역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공론장을 통하여 숙의가 이루어진 후에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 총회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집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미리 거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의자로서의 전문적 검토를 하는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들로서 이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종합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도 민주적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표적 운영이 바로 개혁신앙에 입각한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서 경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평등한 백성으로서 민주적 자치(democratic self-government) 운영이 요구되듯이, 세상 나라에서도 세상 문제를 이성애 입각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자치가 요구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나 세상 나라에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적 자치는 공공성을 가지는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3. 칼뱅의 종교개혁 본질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개혁방향

칼뱅은 1541년 제네바로 돌아와서,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정비를 주도하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다(성석환, 2019:305). 제네바 도시는 교회와 국가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교회론적 안정이 필요하였고, 공화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헌법적 구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Naphy, 2011: 102).

칼뱅의 경우 교회의 일과 세속 사회의 공적 업무에 양쪽 모두 열심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세속 사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칼뱅의 기독교강요에서는 교회가 세속권력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는데, 여기서 교회는 정치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는 부자와 세력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지켜 주도록 국가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교회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참된 종교를 향상시키고 교회의 치리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여, 교회 자체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정정치(theocracy)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두 권력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Graham, 김영배 역, 1971: 84-87).

또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잘못했을 때, 이들을 경고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칼뱅은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것과 두 주체는 서로 구분되어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칼뱅의 교회관이 어떠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칼뱅은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독립적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간의 존경과 도움을 주어서 동일한 백성을 도와주고 지배함으로써, 나란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속 법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국가도 교회의 영적 훈련을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속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교인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영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국가를 위한 한 교회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⁶. 오토베버는 중세 신정정치의 문제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교황의 권세와 황제의 권세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즉 황제의 권세가 커지면서, 국가가 교회의 일까지 간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다(Weber, 김영재 역, 1968: 84-88).

요컨대 21세기 한국교회가 칼뱅이 가졌던 세속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이어받는다 한다면, 세속사회에 민주주의가 성숙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자치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과 제도설계를 하는데 참여하고 낙후된 근린사회의 공공성 높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었고, 세속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방향으로 신학적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신학 이데올로기에 너무 엄격하여 반대자들이나 경쟁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서, 근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신학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적 유연성을 가지고 세속 사회의 낙후된 공공성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

6)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조직화하고, 국회 조찬기도회를 운영하여, 대통령과 정치가들에게 권력적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행태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교회는 그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속사회가 민주공화정으로 성숙하도록 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IV. 공공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린지역자치제도설계에 대한 제언

1. 교회공동체의 공공성

교회공동체가 공공성을 가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공동체가 속해 있는 시민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는 정부영역의 공공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 구성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공화정의 이상을 지향해가도록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는 주권자인 주민과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주민과 시민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정부의 대의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자들에게 경고와 압력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사회구성체로서의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단위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회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또 교회공동체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총회를 구성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를 통하여 교회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선출하고, 교회공동체를 위한 목회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도 한다.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신칭의나 구원예정설 등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전환을 가져온 이론이었지만, 교회공동체의 운영을 장로회를 통하여 운영한다든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총회제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개혁하였다는 것은 기독교가 세속사회에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문화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개혁의 진전에 따라서 교회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이 대의제만이 아니라, 감독제나 회중제로 다른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공동체의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운영의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교회법에 의하여 교회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공화정과 민주정의 의사결정시스템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세속사회를 앞서 나간 놀라운 문화개혁이었다⁷⁾.

그런데, 한국에 도입된 개신교는 개인구원과 개인영성을 강조하는 경로를 밟아 와서, 세속사회에

7) 교회공동체 속에는 이미 대의제, 풀뿌리민주주의, 공공선을 위한 양자의 조화와 균형과 같은 현대 한국의 지방 자치학에서 개혁의 꽃대라고 할 내용을 이미 종교개혁과 공공신학의 논의 속에 함유하고 있는 셈이다. 즉 당회는 대의제에 대한 제도적 표현이고, 공동의회(총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 제도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운영방식의 시도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개혁을 위한 뿌리와 철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의 문화변혁과 민주공화정의 성숙을 위한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의 경제적 번영이 달성되면서, 교회는 건물을 짓고, 교회 재산을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재벌 기업경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개척되어, 재정적으로 어렵고 목회자들의 교회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 교회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개척목회자의 교회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회운영의 정체(politeia)가 독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교회운영의 비리와 교회재정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문제 삼고 비판하는 장로그룹이나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세속사회는 87년의 민주화와 헌법질서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일부 대형 혹은 중소형의 교회공동체에서는 여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전횡과 세습, 교회재산의 사유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규모가 되면 교회공동체지만,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지연하거나 저항하는 일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세속사회에서의 민주성보다 더 뒤쳐진 교회운영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교회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뒤쳐진 비민주성과 제왕적 교회운영의 폐단을 가지고 있어서는 세상에서도 불신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 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의보다 못하게 되면, 밧혀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성과 공화정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다.

2. 교회건물 공간의 공론장 활용 가능성

교회공동체는 내부적인 기능과 외부환경을 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의사결정하고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며, 경험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하며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려 그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하여 대화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다. 지역교회 공동체는 매주 1번씩 예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들이 대면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찬송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생활, 그리고 내면의 생각과 목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환대와 공동체의 운영에 관련된 광고를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보를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소식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관심 이슈와 생활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이슈와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론장을 이끌어 갈 리더십이 추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논의하는 다른 지연공동체 혹은 이슈공동체와의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회 공동체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조직교회의 경우는 당회가 있고,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제직회 등의 하위 구성원 모임들이 있으며, 이슈별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구제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조직이 있다. 위원회 조직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대표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되어서, 이슈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외부의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이슈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교회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슈와 관련된 공론장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또 조직교회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외부 자치공동체 혹은 자치공공조직과 지역사회의 자치를 위한 구역자치회를 만들 수 있다. 구역자치회는 각 구성단체의 대표들의 협의체와 같은 성격이므로, 협의체로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그 소속 조직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아 와서 구역이슈에 대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여야 할 것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구역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체이고 협의체 공론장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구역을 자신의 선거구로 가지고 있으므로, 구역 자치회 즉 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주권자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구역자치회의 협의체 회원들과 소통하게 되면, 이것은 곧 구역자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치공동체나 조직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방의회와 구역자치공동체의 거버넌스, 즉 협치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된다.

공공신학은 교회 공동체가 구역의 공공이슈를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양성해 주는 것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해 주는 학문이다. 이 점에서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방향은 교회 공동체가 공공성을 가지도록 성도들의 책임을 내면적인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공공성을 주도하는 지역인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과 인식을 가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이 공공신학에 기대되는 방향성이다.

3. 근린자치제도와 의 거버넌스 구축

제네바시에 설치되었던 컨시스토리(consistory)의 구성과 기능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네바의 목사단과 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기관이었다. 일종의 종교법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로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며, 사회적 명망 있는 자들로 채워졌고, 제네바시의 소의회와 대의회에서 파송하였다고 한다(성석환, 2019: 307).

컨시스토리의 임무는 종교적 기능만이 아니라 제네바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치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상벌을 과할 수 있었다.

제네바시에서는 입법원이나 정부 관료들도 모두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컨시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컨시스토리가 지역 교회(parish)와 같은 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이다(Naphy, 2011: 107).

칼뱅은 교회와 국가를 한 몸의 두 지체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제네바시민 중에서 적절한 돌봄이 없어서 고통받는 개인이 발생한다면, 제네바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고, 각 개인이 하나의 매듭처럼 서로의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를 원했다(성석환, 2019: 309).

즉 칼뱅은 지역사회를 교회와 한 몸 공동체로 인식하였고, 세속사회의 권위도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속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 한국 지역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세속 정부로 하여금 교회

의 성도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이기도 한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정의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숙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서 숙의공론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2026년 3월말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조직이 되었고, 주민자치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시대를 지나,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던 시대를 거쳐 왔다.

그러다가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과정에 특정 정당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도하는 바람에, 다른 정당은 이것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파적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비판하였기에, 특정 정당 단체장이 된 곳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급격하게 중단해버려서, 주민자치가 마치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는 주민자치가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론적 논거를 찾기 시작하였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주권자인 주민들이 행정과정과 정책과정에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공성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렵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사라졌고, 형성되기 어렵게 되었다.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활성화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철학을 가진 리더가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와 공동체정책을 융합하는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10여 년간의 대도시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청책(정책을 듣는)토론회를 통하여 시장이 직접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현장 공청회 혹은 타운홀 미팅을 실시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역권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주관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하자고 주민주권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 사회에는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다른 정당으로 바뀌면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세

상사회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교회공동체일 수 있다. 즉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정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⁸. 성도들이 개인 차원에서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지라도 교회공동체로서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라고 해서 그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권력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윤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악과 불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잡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오히려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에 기반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는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교회공동체로서 참여할 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정부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2026년 3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읍면동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 공간을 공론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내어 줄 수 있다⁹. 또 주민자치회에 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 조직으로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들인 목회자와 장로들은 세상 나라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사들도 교회공동체 내부의 봉사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8) 여기서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교분리규정은 국가의 특정종교 승인 및 국교화를 금지하는 것이고, 국가와 종교의 상호 지배나 결합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종교를 공적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의 절대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국가가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엽(2020)에 따르면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고, 모든 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국가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종교를 시민사회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종교기관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주민참여, 생활문제 해결이나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은 정교분리원칙과 당연히 양립가능하다고 한. 참조 성경엽,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 『법학논고』 제70집, 2020, 1-26

9)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주민생활문제를 다루더라도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동원으로 판단될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발언,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권유, 특정후보자에 투표권유, 교회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성명, 목회자의 직위와 예배를 활용한 지지호소, 교회신도의 명부, 문자망, 예배참석자 명단의 선거운동이용, 교회시설을 특정 후보자에게만 제공, 주민회의를 가장한 후보자 선거운동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 학문간 융합을 통한 공공성 교육

풀뿌리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웃과 주민들이 서로 대등하면서도 관용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사역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칼뱅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눔으로서 가능하다고 했다(Pattison, 2006: 137).

칼뱅은 개인주의적 영성에 토대를 둔 윤리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윤리였다.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은 시민들이 서로 평등하면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의 윤리를 가질 때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거듭난 크리스천의 윤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것을 관용할 수 있으며, 내가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경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이방인들과의 연대,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연대 등을 통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시민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다(성석환, 2019:312).

또 칼뱅주의를 이어받아 미국의 건국에 이바지한 토머스 제퍼슨(T. Jefferson), 조지 워싱턴(G. Washington) 등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정신에 도입하였던 계몽주의적 이신론자들이었다. 1796년의 트리폴리조약 제11조에서도 미국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은 고전 고대의 정치사상, 계몽 합리주의 정치이론, 청교도적 언약 신학 사상 등 다양하고 상이하기까지 한 사상들의 혼합물이었던 것이다. 기독교신앙이 미국건국에 일정부분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현준 a, 2025: 215).

또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의 영역주권론의 경우도 원래 정교분리와 다원적 사회영역의 자율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전개되는 논리이다(김현준a, 2025: 221).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으며, 어느 한 영역도 다른 영역을 지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가정과 교회, 국가와 학문, 예술 등 각 영역에 고유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제한된 권한만 가진다고 본다. 또 교회도 국가를 대신해서 통치해서도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교육과 정치, 문화와 언론 등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한편, 행정학과 지방자치학은 법치행정을 가장 이상적인 관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법치는 곧 민

주공화정과 주권재민을 표방한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공신학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곧, 세상 학문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시민성을 길러내기 위한 것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도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고, 자치(self-rule)적 공민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경교육과 삶속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제자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성은 세상 나라의 교육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개인주의화되고, 상호 경쟁이 치열하여 불평등과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신학적 교육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행정학과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신학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폴뿌리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공공신학에 있을 수 있다는 발견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제안은 연구자의 상당히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차후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사례연구,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과연 교회공동체가 근린자치 영역에서 유효한 기능과 역할을 해 낼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교회공동체가 근린자치의 공론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 것은 영미계통의 기독교문화속에서는 교회 예배 후에 그 지역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기에,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미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에, 이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한국기독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칼뱅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종교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인철 (2020). 한국 개신교와 보수적 시민운동: 개신교우파의 극우 혐오정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33, 3-30.
- 김영배 역 (1995).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Graham, W. F. (1971). *The Conserva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 His Socio-Economic Impact*. 생명의말씀사.
- 김영재 역 (1995). **칼빈의 교회관**. Weber, O. (1968).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풍만출판사.
- 김찬동 (2026). 정교분리와 지방자치리더십에 대한 정치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64, 105-139.
- 김찬동 (2017).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궁미디어.
- 김찬동 (2015). **주민자치의 이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철호 역 (2008).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 de Gruchy, J. W. (1991). *Liberating Reformed Theology; A south African Contribution to an Ecumenica Debate*.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현준a (2025). 극우 개신교는 무엇을 믿는가: 한국 개신교 극우 내셔널리즘의 신정정치 욕망. **경제와사회**, 제147권. 207-242.
- 김현준b (2025). 근대세계의 내면에서 깨어난 종교권력의 욕망: 한국 개신교 극우화의 역사와 서사. **문학들**, 제82호, 26-53.
- 노재성 (1989). **교회, 민주주의, 윤리**. 나눔사.
- 박영신 (2010). 잊혀진 이야기: 시민사회와 시민종교. 박영신 이승훈 편,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북코리아.
- 서병훈 역 (2012). **대의정부론**. Mill, J. S. (1861).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아카넷.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교수진 (2019).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 성석환 (2019).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새물결플러스.
- 성정엽 (2020).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 **법학논고**, 제70집, 1-26.
- 이상훈 역(2008).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저).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pp.13-44). 북코리아.
- 정재영·이승훈 역 (2014). **기독교와 시민사회**. Wuthnow, R. (1996).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 CLC(기독교문서선교회).
- De Gruchy, John W.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Theological Aesthetics in the Struggle for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Naphy, W. (2011). Calvin's Church in Geneva. in Irena Buckus and Philip Benedict, eds., *Calvin & His Influence*, 1509-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Paeth, S. R. (2008), *Exodus Church and Civil Society: Public Theology and Social Theory in the Work of Jürgen Moltmann*. Ashgate.
- Pattison, B. L. (2006),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ickwick Publications
- Schweiker, W. (2010). Public theology and the cosmopolitan conscience. In D. K. Hainsworth & S. R. Paeth (Ed.)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Stackhouse* (pp. 123-138).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풀뿌리민주주의와 공공성: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Grassroots Democracy and Publicit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김 찬 동 (충남대학교)

논문초록

한국은 헌법에서 민주공화정과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이 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설계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주권자인 주민들이 근린자치와 지역자치 혹은 권역자치에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이 21세기 인류문화에 선도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린자치제도 속에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한국도 도시화되고 시민의 90%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 공동체가 사라진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역할을 근린자치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조직이 교회공동체 조직이다. 교회공동체는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의 개혁만이 아니라, 도시정부와 국가 정치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과 봉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쳤다.

한국 교회는 교회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영성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한 때 큰 부흥이 있었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참여에는 무관심하고 소극적이었다.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의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와 행태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회공동체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치(self-rule)와 민주주의 개혁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교회 내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세상 나라에서 실천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민주주의로 법제는 되어 있지만, 법을 이용한 반민주적 행태와 엘리트들의 반민주적 인식이 독초처럼 돌아나기도 하고 있다. 이에 교회공동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관용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적극적인 공민(public civilian)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공신학에 새롭게 제시하는 공공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방향성이다.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공동체, 능동적으로 세상 나라의 리더로서 교회 직분자들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률적 공간일 수 있다. 이 공간을 더 이상 행정관리의 통제하에 예측되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기반위에서 시민사회의 공동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곳을 통하여 교회공동체에서 함양되었던 거듭난 성도들의 자치(self-governance)를 실천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1장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세상 학문속에서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2장에서 공공신학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근린자치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한국 교회의 사사화의 문제점과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성의 요구가 나타나는 현실을 분석하고 4장에서 공공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와 근린자치에 대한 제도설계의 새로운 논의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행정학(지방자치)과 신학의 융복합을 통한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주제어: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공공신학, 칼뱅, 개혁신학